



“새로운 시대로 대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대도약”을 위한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 확정,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지출구조조정 목표 제시

- 이재명 정부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국정성과의 본격화를 뒷받침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예산 구현
-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과 함께 성과·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 혁신과 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 병행

정부는 3월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였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7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으로 '27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국정성과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①성과·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 재정혁신과 ②적재 적소·불요불급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자원배분을 병행할 것이다.

* ①지방주도 성장, ②모두의 성장, ③안전 기반, ④문화가 이끄는 성장, ⑤평화 뒷받침

또한, 이재명 정부가 예산안 편성지침부터 예산편성의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성과와 참여에 기반한 진정한 국민주권예산을 구현해 나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지출효율화 TF 및 통합성과평가단 발족 등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작업에 조기 착수하여 선제적·

전략적 재원배분을 추진하였으며, 국민과 시민사회·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특히, 기존의 학계·연구기관 중심의 의견수렴 방식에서 나아가, 최초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공식 청취하였고, 국민참여예산 플랫폼(www.mybudget.go.kr)을 통해 다양한 국민제안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번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최초로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방안을 공개하였다. 의무·재량지출 사업, 사업비·경상비, 한시·계속사업에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재량지출 15% 및 의무지출 10% 감축, 사업 10% 폐지(내역사업 기준)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의무지출도 처음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입법조치계획을 수반하게 하는 등 역대 유래 없는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상세하게 포함하였다.

금번 편성지침은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

- ① AX·GX 등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 ②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
- ③ 모두의 성장으로 세대·산업·계층간 양극화 완화 및 저출생 대응
- ④ 국민의 행복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성과와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을 위해

- ①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철저한 성과 기반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 ② 참여·공개 확대로 국민 중심의 재정운용으로의 전환
- ③ 지방우대 원칙 본격화 및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로 균형성장 뒷받침
- ④ 수익자 부담원칙, 이익공유 강화, 체납세액 징수 등 공정한 재정원칙 확립
- ⑤ 예타 제도 개선, 민간투자 확대 등 재정제도 개편으로 효과성 제고 등

과감한 재정운용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의 내용적 특징은 ①국민이 일상에서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것을 곳곳에 목표로 제시하였고, ②의무지출에 대한 절감목표를 최초로 설정하고 제도개선 및 입법조치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지출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③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우대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④수익자 부담원칙, 이익 공유 등 공정한 재정원칙 확립을 강조하였다는 데 있다.

각 부처는 금일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재정당국은 각 부처와 협의·보완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예산실 예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애 (044-214-2330)
		담당자	사무관	박근형 (rmsgudkorea@korea.kr)
	예산실 기금운용혁신과	책임자	과 장	김건민 (044-214-2370)
		담당자	사무관	이상희 (leet88@korea.kr)



붙임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전체 모습

목표

새로운 시대로 **대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대도약**

기본 방향

-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
- **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자원배분**

4대 투자 중점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 AX 본격 추진
-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 K-GX 등 탄소중립 투자
-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 성장

지방주도 성장

- 지방성장거점 구축
- 교육·교통·의료 등 인프라 개선
- 지역을 살리는 K-컬처
- 통합 지방정부 파격 지원

모두의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 스타트업·소상공인 중심 창업생태계
- 청년 회복·경험·성장 지원
- 저출생 대응,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회연대경제로 포용적 통합

국민안전, 평화기반 구축

- 안전이 기본인 사회
- 자주국방 기반 강화
-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 국익중심 외교·한반도 평화공존

재정 운용 혁신

지출구조조정

-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 절감
- 시민사회 의견수렴 대폭 확대 등 투명성 제고

참여·공개

- 예산 전 과정에 국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 사업설명서, 통계자료 등 재정정보 공개 확대

균형성장 뒷받침

- 지방우대원칙 본격 적용
-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공정한 재정원칙

- 수익자 부담 및 이익공유 원칙 강화
- 부당이득 환수 등 공정경제 실현 뒷받침

재정제도 개편

- 예비타당성조사·민간투자 등 재정투자제도 개선
- 특별회계·기금의 신설·정비 등을 통한 효율적 자금운용